

보도자료



K I H A S 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https://kihasa.re.kr>

보도내용	□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59호 발간 -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
분 량	총 4매(그림 3종 포함)
배포일시	2025년 11월 24일(월)
보도일시	즉시

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원해…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

- ‘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’(2024) 결과 응답자의 94.9%가 "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"에 동의해
- 응답자 10명 중 4명은 ‘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’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, 응답자의 약 56%는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
- 조사 결과,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

※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,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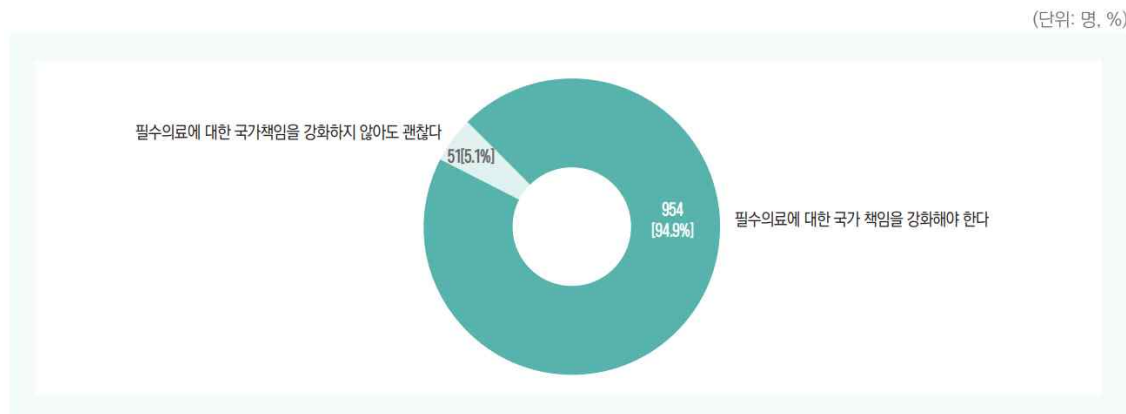
※ 이 글은 배재용, 서제희, 유정훈, 강희정, 전수옥. (2024). 필수·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(한국보건사회연구원)의 일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.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『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』 제459호 『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』을 발간했다. 연구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배재용 연구위원이다.
- 배재용 연구위원은 “‘필수의료’라는 개념과 용어는 최근 들어 주요한 정책 용어 및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용어라고 볼 수 있다.”면서, “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,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

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.”고 말했다.

- 배 연구위원은 “이 글에서는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를 고찰하고 일반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‘필수의료 확충·강화’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”고 말했다.
-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,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’ 결과, 응답자의 94.9%가 ‘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’는 주장에 동의했다.

[그림 3]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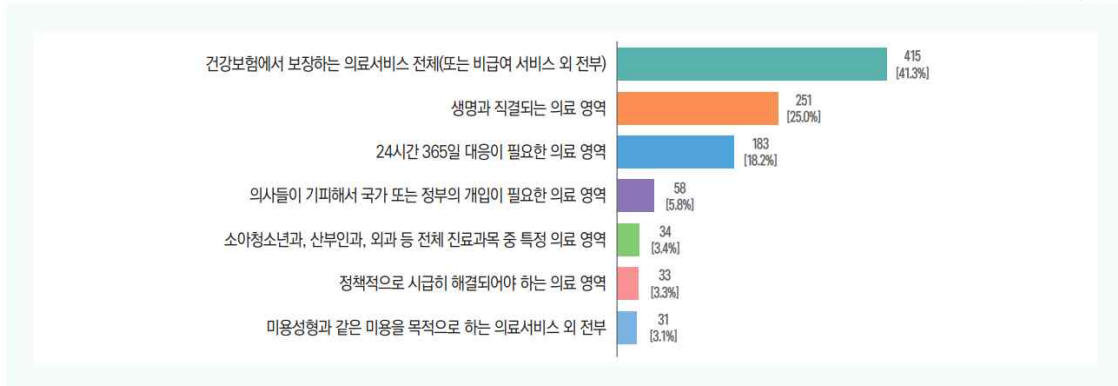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“필수·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”, 배재웅 외, 2024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. 107.

- 그러나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응답자의 55.6%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초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. 구체적으로 ‘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’이 25.0%, ‘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’이 18.2%를 차지했다.
- 반면, 응답자의 41.3%는 필수医료를 ‘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(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)’로 인식했다.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다.

[그림 1]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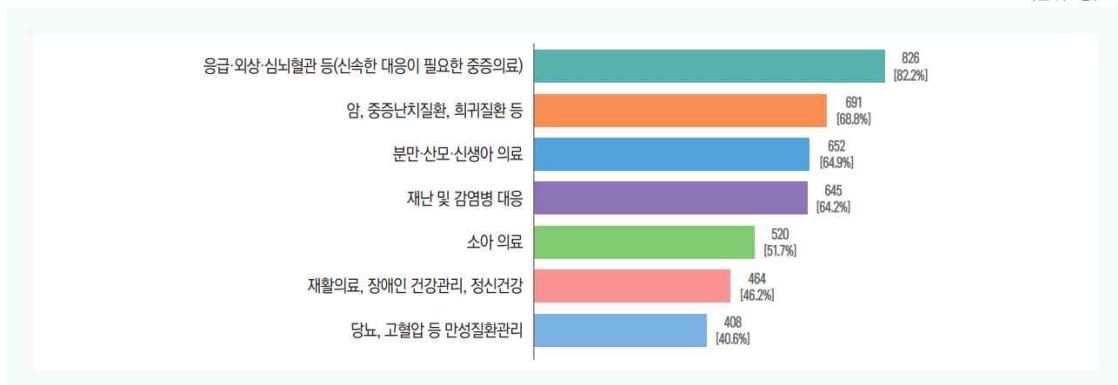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“필수·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”, 배재용 외, 2024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. 103.

-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‘응급·외상·심뇌혈관 등(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)’으로,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.
- 이와 더불어,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‘분만·산모·신생아 의료’와 ‘소아 의료’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선택했다.
- 반면, 다수의 응답자들이 ‘재활의료, 장애인 건강관리, 정신건강’, ‘당뇨,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’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,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영역을 포함하여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.

[그림 2]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(복수 응답)

(단위: 명, %)



자료: “필수·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”, 배재용 외, 2024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. 105.

- 배재용 연구위원은 “‘필수의료’는 이론적·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, 규범적·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”이라며, “필수의료 확충·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.”고 제언했다.

※ 이슈엔포커스 제459호 원문 보기

<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8223>